

지리산 친환경 전기열차 도입

남원시-한국교통연구원 협약

남원시는 주요 현안사업인 '지리산 친환경 전기열차' 도입 사업이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연구원이 지난해 12월 19일 친환경 전기열차 국내 도입방안 연구용역 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사업추진을 탄력을 받게 되었다고 밝혔다.

남원시에 따르면 지난 15일 국토교통부는 한국교통연구원에서 중앙부처(국토교통부, 문화체육관광부), 관련 전문가, 지자체(전라북도, 남원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친환경 전기열차 국내 도입방안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갖고 전문가와 지자체의 다양한 의견을 교환하였으며, 남원시는 최초로 시도되는 사업인 만큼 국가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에 적극 건의했다.

이에 따라 한국교통연구원은 오는 10월까지 친환경 전기열차의 국내 도입과 관련해 해외 사례와 관련 기술·제도를 분석하고, 도입 시 필요한



남원시 지리산 친환경 전기열차

법령과 기술기준 등을 도출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할 예정이며, 이번 연구에서 친환경 전기열차에 적합한 설비형식·교통방식을 제안하고, 민간사업자 등이 사업을 추진할 때 사업허가 등 충돌되는 법령에 대한 검토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새로운 교통수단의 도입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안전검사 항목·방법을 마련하고, 안전관리계획의 수립·검토, 사고 시 대응체계 등

안전관리 규정에 대한 개선방안도 도출할 예정이다.

산악지역 주민들의 교통기반권 확보와 산악관광 다변화에 따른 새로운 관광모델 제공, 지방도도를 활용한 친환경 녹색교통시스템 도입으로 4계절 관광을 내세우며 도입을 주장했으며, 정부가 주도적으로 나서 친환경 전기열차 도입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돼 있었다.

/남원=김기두 기자

임실군 양질의 하수도 서비스 제공

임실군이 공공하수처리시설에 대한 운영 관리대행으로 전문성 향상 및 기술성 강화로 주민들에게 양질의 하수도 서비스를 제공하게 됐다.

군에 따르면 17일 군수실에서 임실군 공공하수도 관리대행 업무협약 체결했다. 군은 지난 달 임실공공하수도 관리대행사 선정을 위한 기술제안서 평가를 실시하고 우선순위 업체로 (유)일토씨엔엠, (주)도화엔지니어링을 결정한다.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은 환경부의 물산업 육성정책에 부응하고 하수처리시설에 대한 기술

전문성 확보로 공공수역 수질보전에 기여해 국가에서 장려하는 시책이다.

군은 시설 운영 인력의 잦은 인사이동 및 결원 시 인원충족이 제때 이루어지지 않으면 효율적 시설관리에 어려움과 관리대행의 타당성 조사와 전문 민간기업에 위탁관리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어 시행하게 됐다고 밝혔다.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사는 올해 1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3년간 임실공공하수처리시설과 31개소 소규모공공하수처리장의 각종 설비 운영과 수질기



임실군 공공하수도 관리대행 업무협약 체결 모습

준 준수 등의 공정관리를 맡게 된다. 군은 이번 협약으로 하수처리에 대한 기술과 노하우를 갖고 있는 전문업체가 운영과 관리를 맡음으로써 군민들에게 양질의 하수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으며, 공공수역의 수질을 개선하는데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임실=진홍영 기자

임실군의회 토양정화업 철회 주민 입장 대변

임실군의회(의장 신대용)는 최근 제 285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에서 광주광역시와 임실군 간의 토양정화업 변경등록 수리를 철회하고 원상회복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군의회는 "이번 신덕면 수처리 토양정화업 변경등록 수리건에 대해 임실군의 부정적 의견과 주민의 반대여건을 무시하고 수리한 광주광역시의 일방적인 행태에 군민을 대표하는 기관으로서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토양환경보전법 제23조의7은 토양정화업을 하려는 자는 시·도지사에게 등록 하도록 명시하고, 환경부 예규

제593호 '토양정화업 등록·관리 업무처리지침'은 법령에 근거한 시·도지사를 사무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라고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반입정화시설 소재지인 임실군은 허가 권한은 없고 타법 저촉여부 등 협의 기관일 뿐이며, 상급기관인 전북도청은 협의기능 및 어떠한 권한과 책임이 없어 토양유출 및 식수원 주변 환경오염 등 그 피해는 고스란히 임실군과 지역주민이 떠안게 되었다.

이에 군의회는 "광주광역시는 임실군과 지역주민의 반대여야 표시를 무시한 토양정화업 변경등록 수리

를 철회하고 원상회복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어 "전북도는 타시도에서 반입된 오염토양을 취급하는 토양정화업이 도민의 의견을 무시하고 행정처리되는 작금의 행태가 도민의 의사를 무시한 처사임을 통감하고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제도개선에 적극 나설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군의회는 제285회 임시회 기간 중 토양 정화업 등록부지 교량 통수가능 하천단면 확보 적법여부에 관한 청원에 대하여 청원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장종민)를 구성, 세부적인 심사 및 현장을 답사하여 지역주민들과 진정 한 대화를 나누고, 청원으로 채택한 바 있다.

/임실=진홍영 기자

순창군, 소비자가 뽑은 브랜드 대상 수상

귀농귀촌부문

순창군이 '소비자가 뽑은 가장 신뢰하는 귀농·귀촌도시'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또 한번 이름을 올렸다. 군은 17일 서울 밀레니엄 힐튼호텔에서 진행된 '2019소비자가 뽑은 가장 신뢰하는 브랜드 대상' 귀농귀촌 도시부문에서 대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이날 행사는 디지털조선일보가 주최하고, 조선일보, TV조선, 산업통상자원부, 농림축산식품부 등이 후원했다.

또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들을 위한 선배귀농인의 적극 상담, 귀농귀촌센터의 체계적인 지원, 다양한 귀농정책도 한 몫 했다. 순창군은 현재 청년귀농인 유

치사업, 영농정착을 위한 멘토링 사업, 화합한마당행사, 귀농귀촌인과 함께하는 마을환경행사, 동아리활동 등 다양한 지원정책을 펴나가고 있다.

황숙주 군수는 "귀농귀촌 정책은 지역소멸을 극복하고 지역에 활기를 불어 넣을 수 있는 중요한 사업이다"면서 "이번 수상을 계기로 앞으로도 귀농인과 지역민이 함께 상생발전 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군은 올해부터는 11개 읍면을 순회하며 지역인 라디오교육과 귀농귀촌 지원센터를 활용한 소양교육과 영농 기술교육 등을 강화해 귀농 귀촌인들의 안정적인 조기 정착에 집중할 방침이다. 순창=이양원 기자

지역 매아리

남원시, 축산물 위생점검 실시

남원시는 오는 설을 맞아 23일부터 30일까지 축산물 취급업소의 경각심 고취 및 위해사고 사전예방을 위해 축산물의 생산·유통단계별 위생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에서는 관내 축산물이력제 이행주체 231개소 중 무작위로 선정하여 실시하게 된다.

특히, 최근에 행정처분을 받은 기록이 있는 업체나 최근 3년간 점검을 하지 않은 업체를 우선 선정할 예정이며, 철저한 점검을 위해 명예축산물 위생감시원, 전라북도청, 남원시 축산물 위생 담당이 합동으로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설 명절에 축산물의 유통이 증가함에 따라 유통되는 축산물의 수거검사를 통한 불량축산물을 적발하여 관내 축산물의 안전성 및 축산물이력제 유통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수입폐지고기 이력관리제 시행(18.12.28.)에 따른 수입축산물 이력관리제 변경사항을 지도·교육할 예정이다.

유통되고 있는 축산물을 일부 수거해 DNA동일성검사를 통해 판매되는 축산물이 수입산에서 국내산 축산물로 둔갑되어 판매되지 않는지, 도축일자 속이 지 않는지와 같은 내용을 확인할 예정이며, 이번 점검에서 적발될 경우 과태료 및 행정처분 및 축산물이력제 위반사실 공표시스템에 등록할 예정이다.

/남원=김기두 기자

농업인·국가유공자·장애인

지적 측량수수료 감면

순창군이 농업인, 국가유공자,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올해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지적측량 수수료의 30%를 감면한다.

감면대상은 농업인, 국가유공자, 장애인(1급부터 3급)을 대상으로 하며, 국가유공자는 본인과 유가족 중 배우자, 자녀, 부모를 포함한다.

특히 농업인은 정부보조로 시행하는 사업인 저온저장고 건립, 곡물건조기 설치, 농촌주택 개량사업의 대상으로 한정한다.

지적측량 할인제도는 경제복원특량 완료 후 12개월 이내에 제외되는 경우 경과기간에 따라 해당년도 수수료의 50%~90%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단, 동일 의뢰인이 동일한 필지에 대하여 신청하는 경우에 할인을 받을 수 없고, 토지이동으로 기 처리한 필지의 형태가 변경된 경우에는 할인 받을 수 없다. 군 관계자는 "이번 지적측량수수료 감면혜택이 보다 많은 군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안내와 홍보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순창=이양원 기자

이환주 남원시장, 시민과 눈높이 소통

남원시는 올해 시장 철학을 편안한 행정으로 시민들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는 평이근민(平易近民)을 실행 목표로 하고 있는 이환주 시장이 시민들과 눈높이 소통을 펼치기 위해 오는 21일 오후 주천면을 시작으로 2월 28일까지 23개 읍·면·동을 방문해 시민과 함께하는 시장설명회를 갖는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국립공공의료대학원 유치, 지리산 친환경 전기열차도입, 화

장품클러스터구축, 월락정수장 정비, 일반산업단지조성, 문화관광 사업 등 현안사업의 진행상황을 설명하고, 시민들의 성원과 협조를 당부할 예정이다.

이 시장은 "시정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시장에 대한 이해와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시민을 만드는 친절·공감행정을 펼쳐 다 함께 행복한 남원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남원시, 긴급지원제도 기준 완화 홍보

남원시 주민복지과는 주 소득자의 질병, 사망, 휴·폐업, 소득상실 등으로 인해 갑작스런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에 대한 신속한 지원으로 위기상황을 탈피하게 되었다.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하도록 도와주는 긴급복지 지원제도가 2019년부터 기준이 완화되어 시행된다고 홍보하고 나섰다.

이번 홍보는 지역민들에게 보다 폭 넓은 혜택을 주기 위한 것으로, 남원시는 2018년도 한 해 동안 379가구에 6억1백만원의 지원을 실시한바 있다.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시행하고 있는 긴급지원제도는 가구별 기준중위소득 75%이하(346만원/4인기준), 일일재산 1억1,800만원, 금융재산 500만원 미만의 자격 기준을 갖춘 대상자에게 생계, 의료, 주거비 등 각종지원을 통해 위기상황을 탈피하도록 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었다.

이는 일반재산 기준이 전년 대비 약 3천만원 증가되는 재산기준 완화로 보다 많은 대상자들이 지원 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또한, 2019년부터는 위기 사유에 대한 인정범위를 ▲복지사각지대 발굴대상자, ▲통합사례관리대상자, ▲자살고위험군(자살시도자 및 유가족)으로 확대 적용하여 보다 많은 대상자들이 도움을 받도록 해 위기기구를 돕는다.

빈곤층으로 가는 것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강환구 주민복지과장은 "지속되는 경제침체와 불황속에 대상자 기준 범위의 포괄적인 수용하는 등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신속한 지원을 실시해 필요한 대상자들이 적절한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대한민국 치즈의 수도
임실 치즈

별기에 출신 자정환 신부(Didier 'Serstevens)가 국내 최초로 개발 보급한 한국 치즈산업의 원조 임실치즈, 신선한 원유와 40년 이상의 가공기술력으로 만든 임실치즈는 맛이 고소하고 담백하여 어린이, 노약자의 영양간식으로 매우 좋습니다.